

네트워크 로펌, 광주·전남 잠식에...지역 법조계 '아우성'

6개사 10곳에 분소...사은품 등 공격적 홍보로 지역사건 쓸어담아 갈등 상당 따로 서면 따로 소송 따로...책임 질 변호사 없어 서비스 질적 하락 변호사 없이 직원만 상주하기도...여수·목포 변호사들, 민원·징계 요청

광주·전남 법조계에서도 일명 '네트워크 로펌'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 로펌이 광주지역 법률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지역 변호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점에 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여수와 목포 지역 변호사들이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네트워크 로펌에 대한 민원과 징계를 요청했다. 징계 요청 사유는 허위광고 등의 광고규정 위반과 사무소 운영규정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광고시 금지 단어를 사용하고, 홍보를 위해 사은

품을 내걸었다는 것이다. 사무소에 변호사가 없고 사무장 등의 직원만 상주하고 있다는 점도 징계요청 사유로 꼽힌다. 변호사법 시행령은 '분사무소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가 주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전남 전남지역 변호사들이 '네트워크 로펌'에 대해 민원을 세우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서다. 광주·전남에 진출한 네트워크 로펌은 지난해 5곳이었지만 올해 한 곳이 늘어 총 6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8월 현재 광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지역 법무

? 네트워크 로펌이란 하나의 법무법인 이름으로 전국 주요 거점 지역에 사무소를 내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법인은 40개인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숫자다. 네트워크 로펌들은 광주와 순천, 목포 등 총 광주·전남 10곳에 분사무소를 열고 법률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 곳들에는 총 37명의 변호사가 등록돼 있다. 이들은 거액의 광고비를 들여 포털 사이트 등에 배너 등의 광고로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인 소개나 사무실을 방문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을 수임하는 전통적인 법률시장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케팅으로 시장을 파고 들고 있다. 일부 네트워크 로펌은 사무실을 법원 주변이 아닌 도심 근처에 두기로 한다. 실제 광주에서도 지난

동 법조타운이 아닌 동구 충장로에도 네트워크 로펌의 사무실이 있다. 또 네트워크 로펌들은 일명 '전관 마케팅'을 활발하게 하며 성범외나 음주 운전, 마약 초범 등의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지역 변호사들의 이야기다. 지역 변호사들은 법률서비스 하락을 우려한다. 변호사들은 "네트워크 로펌은 의뢰인이 찾아오면 수사 단계에서는 검·경 출신이, 재판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이 사건을 맡는다고 안내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을 전체적으로 보고 책임지는 변호사는 없다"고 강조한다. 한 변호사가 체임피오 사건을 도맡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광주 쪽에 사건이 몰리면 법정에 제출할 의견서 등 서면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변호사가 작성하고, 법정 출석은 지역 변호사가 출석하는 식이다. 결국, 사건을 전담하는 변호사 없다보니 사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패소시 책임관계가 불분명하다는 한계가 있다. 유명 법조인 출신 전관을 앞세우는 광고가 대부분이지만 실제로는 전관 출신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등 과장 광고도 문제로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네트워크 로펌이 사건을 쓸어담으면 지역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네트워크 로펌이 공동 프랜차이즈가 되고 지역 로펌은 소멸해 젊은 지역 변호사들의 수도권 이탈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 광주지역 한 변호사는 "네트워크 로펌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달에 1~5억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쏟아부어 지역 시장을 공략해도 영세한 지역 변호사들이 대응하기 어렵다"면서 "네트워크 로펌이 지역 사건을 다 쓸어담으면 지역 법조계 소멸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도광산 운영 일본 기업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 제기 광주지법 "6명에 배상하라" 판결

'사도광산'을 운영한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부가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27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9명이 미쓰비시 마테리 아루(옛 미쓰비시 광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6명 중 4명에게는 1억원씩을, 나머지 원고 2명은 상속분에 해당하는 1666만여원과 7647만여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3명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피해자들은 일제강점기 미쓰비시광업에 강제로 끌려가 광산에서 노역에 시달렸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향했다. 지난 2017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씨는 강제 동원 당시 경험담을 담아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라는 회고록을 출판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연 이사장은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미쓰비시 광업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권의 소멸시효가 지났으며 청구를 기각했다. 미쓰비시 광업은 일본 각지에서 사도광산을 비롯해 탄광을 운영했지만 이번 소송 원고 중 사도광산 강제노역 피해자는 없다. 사도광산은 최근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내용을 삭제한 채 유네스코 산업유산으로 등재해 논란이 됐다. 승소 판결을 받은 고(故) 이상업 씨는 아시아태평양전쟁 막바지인 1943년 11월 일제에 의해 후쿠오카현 미쓰비시광업 가미야마다(上田) 탄광에 끌려갔다. 이씨는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캐고 탄차를 미는 중노동에 약 2년간 하는 사이 심폐증 환자가 됐지만 제대로 된 임금이나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귀향했다. 지난 2017년 90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씨는 강제 동원 당시 경험담을 담아 '사지를 넘어 귀향까지'라는 회고록을 출판했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의 지원단체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 이국연 이사장은 "사도광산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가 미쓰비시 광업에 대해 사법 판단을 내린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19명이 제기한 다른 손해배상 소송도 광주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공중화장실 전기안전 점검 27일 광주 북구 두암동 체육공원 공중화장실에서 북구청 직원과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분전반 내 절연장치 및 누전차단기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

'5·18 왜곡 현수막' 민경욱 전 국회의원 고발

가가호호공명선거당도 함께

광주 도심에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8월 22일자 광주일보 7면)한 민경욱 전 국회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 5·18왜곡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27일 민 전 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이 창당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은 최근 광주시 북구 운암동과 서구 서창동, 광산구 무진대로 등지에 '5·18 헌법수목

절대 반대, 국민 명령이다'는 내용의 정당현수막을 설치했다. 최근에는 '5·18에 북한 개입은 사실, 현재 유공자 상당수는 가짜'라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고발장에는 최근 발간된 5·18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5·18 북한군 투입설'이 거짓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이 5·18을 폄훼하기 위해 날조된 믿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5·18진상조사위 종합보고서에는 '5·18 당시 북한군 광주 일일 침투 주장은 구체적인 근거가 결여돼 있으며 타당성이 떨어지는 무리한 주장'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고발장에는 현재 5·18 유공자들이 법률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되는 등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유공자 상당수가 허위라는 주장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5·18기념재단과 광주시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인해 5·18을 왜곡하는 정당현수막을 제재하는 광주시 옥외광고물 조례에 제동이 걸리자 5·18왜곡 처벌법을 들어 민 전 의원과 가가호호공명선거당을 고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사법부를 통해 수 차례 허위로 판결된 내용을 되풀이하며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하고 진실 왜곡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반복되는 왜곡의 고리를 끊기 위해 5·18진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진상 규명특별법을 강력하게 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여수 쇼핑몰서 흥기 들고 배회 주변 행인들 신고로 붙잡아

여수의 쇼핑몰에서 흥기를 들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수경찰은 20대 A씨를 경범죄처벌법상 흥기 소지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낮 12시께 여수시 봉산동의 한 쇼핑몰에서 흥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흥기를 꺼내 손에 들고 쇼핑몰에 들어가려다 주변 행인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어머니의 동료 직원을 만나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적은 없으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보고 응급입원 조치시키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